

aT,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 가동 북미·유럽 등 권역별 전략품목 육성

내달 3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히트상품 발굴 등 경쟁력 강화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차 세대를 겨냥한 K-푸드의 발굴에 나선다. 현재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유망 품목을 선정·지원해 세계 식품시장에서의 미래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는 전략이다.

aT는 ‘2026 글로벌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푸드 전략품목을 육성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월3일이다.

우선 시장동향 및 잠재력을 고려해 권역별 전략품목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식품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너지를 유도한다. 또 민간 주도의 마케팅을 통해 히트상품을 발굴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민·관 수출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K-푸드 수출기획단’에서 권역별

전략품목군으로 선정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북미의 발효·간편식품 ▲중화권의 프리미엄 한식·건강기능식품 ▲유럽의 비건·냉동식품 ▲아세안과 중동의 할랄식품 ▲중남미의 길거리푸드 등이다. 또 신선 농축산물과 전통주의 경우, 전 권역에 걸쳐 고르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기업 여건에 따라 3가지로 운영한다. 첫째, ‘밸류업’이다. 컨소시엄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K-푸드 소비 붐 조성한다. 둘째, ‘브랜드업’이다. 중소·중견 수출 유망기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에 현지 밀착 컨설팅을 제공해 차세대 히트상품 육성을 지원한다. 셋째, ‘스타트업’이다. 수출 초보기업의 신규 수출 상품 및 ODA(공적개발원조) 등 특수시장용 제품 개발을 지원해 신규 유망품목이 끊임없이 배출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형태로, 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 품목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망을 보유한 선도가

업이 수출초보 기업과 유통망을 공유해 동반 성장을 피하거나, 이른바 스트리트 푸드라는 테마 아래, 떡볶이·음료 등 연관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각제품의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단독 진출 대비 높은 파급력을 낼 수 있다.

또 기업의 필요에 따라 지원 항목을 자유롭게 조합해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현지 한류 행사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대규모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등 시장 및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신규사업은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유망 수출 품목을 새로이 발굴하는 든든한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서는 다음 달 3일까지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김현철 KTR 원장(사진중앙)이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협회장(오른쪽), 한일영 슈어소프트테크 부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KTR

KTR, 자동차 SW 평가장비 국산화 추진

차세대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자율주행차와 소프트웨어 정의차량(SDV) 등 차세대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수입에 의존해 온 자동차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KTR은 지난 13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슈어소프트테크와 ‘차세대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기반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 기술 시험장비 개발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기관은 인공지능(AI)·네트워크 등 차세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시험장비 개발과 국산화를 공동 추진한다. 특히 KTR은 현재 해외 장비에 의존해

온 자동차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 장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차량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인 AUTOSAR의 보안 모듈인 SecOC(Secure Onboard Communication) 적합성 평가 기능을 적용해 평가 범위를 사이버보안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SDV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차량 내부 통신 보안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세대 모빌리티 평가장비 국산화와 신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하는 AI 시험평가 인프라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정위, 리베이트 제약사 2곳 적발·제재

‘법인카드 갱’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국제약품 과징금, 동성 제약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병원에 금품과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2곳을 적발해 제재한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동성 제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회사의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 소형가전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현금이 필요한 경우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갱’ 등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동성 제약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 유지 및 증대를 대가로 약 2억5000만원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 제약은 초기에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고, 이후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

으로 영업 방식을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해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병·의원에 리베이트 지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안강망어업 등 수산용어 순화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 추진”

해양수산부가 올해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에 따라 안강망어업은 고정자루망어업으로, 기선권현망어업은 기선선인망어업으로 순화한다.

수산분야 용어는 116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근거로 사용돼 왔다. 이에 일본식이나 한자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해수부는 순화용어 후보를 정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후 득표수가 가장 많은 ‘고정자루망어업’과 ‘기선선인망어업’을 순

화용어로 선정했다.

안강망어업의 순화용어로는 ‘맞으로 자루그물을 고정하는 어업’이라는 의미가 더 명확한 고정자루망어업으로 선정했다. 기선선인망어업은 어업인들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용어로, 동력선을 사용하여 자루의 양쪽에 기다란 날개가 달린 그물을 배 가까이 던져놓고 끝줄을 당겨 대상물을 잡는 어업인 ‘선인망’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렵게 사용되었던 수산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하천 주변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습지 조성 등 공모사업 100억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주변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담반을 구

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했다. 또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한 것.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

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 10개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다음 달에 완료되며 오는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촌진흥청, 농업인 단체 소통 강화

이승돈 청장, 한종협 6개 단체 간담회

농촌진흥청이 6개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농촌이 직면한 공동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청년·여성 농업인 등과 만났다.

18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승돈 농진청장(사진)은 지난 12일 전북 전주 본청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소속 6개 단체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청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 자급기반 강화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 개발·보급 ▲살기 좋은 농촌 조성

과 국가 균형 성장 ▲케이(K)-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농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수렴한 의견을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